

인도주의 분단정치*

민주화 이전 한국 사회 남북이산가족 문제

이수정(덕성여자대학교)

이 글은 1990년대 민주화 이전, 한국 사회에서 이산가족 관련 인도주의 담론이 반공주의와 접합함으로써 남한 정권이 북한 정권과 대비,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해온 과정을 분석한다. 필자는 이를 ‘인도주의 분단정치’라고 명명한다. 이때 ‘인도주의’는 독립적이고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는 추상적인 가치나 지향이 아닌, 항상 다른 담론과 접합되어 특정한 효과를 생산하는 일단의 담론과 실천의 집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산가족 관련 담론이 집중적으로 생산된 세 영역—남북대화, 미디어, 교과서—을 살펴봄으로써 남한에서도 이산가족 이슈가 얼마나 정치적인 이슈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도주의 이슈로 프레임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동시에 이 글은 이산가족 이슈를 구성하는 다양한 담론 간 접합 양상의 불완전성과 담론적 이종성을 드러냄으로써, 이후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이슈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었음도 논의한다.

주제어: 이산가족, 인도주의, 반공주의, 분단정치, 분단언어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2장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Soo-Jung Lee, “Making and Unmaking the Korean National Division: Separated Families in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Eras”(Ph.D. Dis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6).

1. 들어가며

1995년 3월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는 서명운동 분야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1983년 다양한 실향민 조직에 의해 구성된 이 조직은 한국 사회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이다.¹⁾ 위원회는 1993년 남북이산가족 재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153개국에서 2,120만 2,192개의 서명을 받아 최다국가 최다서명으로 국제기네스 북협회로부터 공식적인 기록을 인정받았다.²⁾ 1998년 필자가 이산가족 관련 현장연구(fieldwork)를 진행할 당시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간부 중 한 명이었던 최기선은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했다.³⁾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위원회의 역사와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 캠페인에 대한 언론홍보지를 보여주었다. “참 성공적인 캠페인이었지”하고 그는 회상했다. 그는 캠페인을 하러 다니면서 만난 외국인 대다수가 왜 50년이 넘도록 남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다 물어. 왜 남북이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말이야.” 그리고 재빨리 덧붙였다. “그게 다 그 사람들이 공산당을 겪어보질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남한의 ‘인도주의적’ 접근과 북한의 ‘정치적’ 접근을 대조하며, 이산가족의 비극이 지속되는 데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주

1)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서울: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1991).

2) 『한국경제』, 1995년 3월 17일, “남북이산가족 재회촉구/최다서명 등 기네스북 올라.”

3)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한다.

장하였다.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 문제로 프레임을 바꾸고 북한을 비판하는 최기선의 발언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당시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과 맞닿아 있었다.

이 글은 이산가족 이슈 관련 한국 사회 담론에서 이렇듯 ‘인도주의’와 ‘반공주의’가 접합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필자는 이를 ‘인도주의 분단정치’라고 부를 것이다. ‘분단정치’는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이 서로를 부정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적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정치,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단을 강화하는 정치를 일컫는다. 이때 정치는 사회의 다른 영역, 즉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과 분리된 공식적 영역의 정치가 아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도덕적 영역을 포괄한 ‘권력의 다양한 양상’으로서의 정치를 의미한다.⁴⁾ ‘인도주의 분단정치’란 분단정치에 인도주의 담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 글은 이 중 ‘이산가족 이슈’를 중심으로 한 남한의 분단정치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이 글에서 논의하는 ‘인도주의 분단정치’란 이산가족 이슈를 인도주의 문제로 동원하면서 북한 정권을 반인도적인 집단으로 비난하고, 이를 통해 분단체제를 강화하는 남한 사회의 정치를 일컫는다. 많은 학자들이 한반도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늘 정치적인 문제였다고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대중적 인식 및 담론은 늘 이 문제가 ‘순수하게 인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⁵⁾ 이 글은 이러한 지배적 인식/담론이

4) Stuart Hall, *The Hard Road to Renewal: Thatcherism and the Crisis of the Left* (London & New York: Verso, 1988), p.3.

5)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서울: 역사비평사, 1998); 김귀옥, “이산가족의 범주화와 공동체 형성방안,” 『역사문제연구』, 제19호(2008), 313~352쪽; 김재용, “이산가족 문제의 정치성과 인도주의,” 『역사비평』, 제44권(1998), 83~94쪽; 이용기, “이산가족 연구 어디까지 왔나,” 『역사비평』, 제44

발생하게 된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산가족 관련 담론이 집중적으로 생산된 세 영역, 즉 남북대화, 언론,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한에서도 이산가족 이슈가 얼마나 정치적인 이슈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도주의 이슈로 프레임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동시에 이 글은 이산가족 이슈를 구성하는 다양한 담론 간 접합 양상의 불완전성과 담론적 이종성을 드러냄으로써,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이슈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었음도 논의한다.

2. 이론적 자원 및 분석 대상

이 글에서 필자는 ‘인도주의’를 중립적이고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는 추상적인 가치나 지향이 아닌, 항상 다른 담론과 접합되어 특정한 효과를 생산하는 일단의 담론과 실천의 집합으로 다룬다.⁶⁾ 리처드 윌

권(1998), 252~270쪽; James Foley, “Divided fami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Ph.D. diss., University of Sheffield, Sheffield, England, 2000).

6) 인도주의 담론의 정치성에 대한 사례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앤드루 라타스(Andrew Lattas)는 파푸아 지역에서 호주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도주의가 식민지 프로젝트와 백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동원되었는지 보여준다. 라타스에 따르면 호주 식민 행정가들은 ‘더 나은 문화’가 ‘신성한 신뢰’와 더불어 원주민들을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향상시키고 인류의 구원과 속죄를 약속한다는 ‘자선(philanthropy)’으로 파푸아에 대한 지배를 의미화하였다는 것이다. Andrew Lattas, “Humanitarianism and Australian Nationalism in Colonial Papua: Hubert Murray and the Project of Caring for the Self of the Colonizer and Colonised,” *The Australian Journal of Anthropology*, Vol. 7, No. 2(1996), pp.141~164. 커트 밀스(Kurt Mills) 또한 미국의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가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목표 중 하나로 인도주

슨(Richard A. Wilson)이 인권과 관련하여 지적했듯이 “담론, 역사, 그리고 맥락 밖에 있는 [인도주의의] 근본적 성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⁷⁾ 이러한 이해는 특정한 인도주의 담론과 실천의 역사적이고 사회정치적 맥락,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인도주의’라는 말 자체가 무거운, 그러나 추상적인 도덕적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한 인도주의 담론이나 실천을 역사화/정치화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필자는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민주화 이전 시기, 분단정치에 깊이 각인된 지배적 이산가족 담론을 분석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할 세 영역 — 남북대화, 미디어, 초등학교 교과서 — 은 남한 사회에서 이산가족 담론이 가장 활성화된 동시에 정권의 의지가 잘 반영된 영역이다. 이산가족 관련 남북대화를 주도한 적십자사는 NGO의 외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적십자사가 제안한 대북 어젠다와 활용 언어는 정권의 의지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 시기 미디어와 교과서 또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 정권의 통제를 받았다. 따라서 이 세 영역에서 사용된 담론은 남한 정권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 텍

의 실현을 내걸었음을 예로 들면서 인도주의가 얼마나 현대 정치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Kurt Mills, “Neo-Humanism: The Rol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Norms and Organizations in Contemporary Conflict,” *Global Governance*, Vol. 11(2005), pp.161~183. 한편 리사 말키(Liisa Malkki)는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여의 효과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는 많은 인도주의 관여들이, 보편적 인류애를 추구한다는 이상을 가지고 난민들을 탈정치·탈역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Liisa H. Malkki, “Speechless Emissaries: Refugees, Humanitarianism, and Dehistoricization,” *Cultural Anthropology*, Vol. 11, No. 3(1996), pp.377~404.

7) Richard A. Wilson, *Human Rights, Culture & Context: Anthropological Perspectives*(London & Sterling, England: Pluto Press, 1997). p.7.

스트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 세 영역은 담론생산 장으로서 조금씩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산가족 관련 대북제안 및 남북대화와 관련된 영역은 정치적, 정책적 레토릭이 활성화된 장으로서, 북한, 남한 내부, 그리고 국제사회라는 세 차원의 청자를 가정한다. 북한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상대로 한 ‘대화’의 장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고 남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과 타협이 동시에 일어나며 매우 정치적이고 중층적인 수사가 지배적인 장이다. 미디어는 주로 남한 내부를 타깃으로 하며 남북대화보다는 훨씬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담론이 펼쳐지는 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단순보도, 심층기획 보도, 사설, 내·외부 칼럼 등 다양한 보도의 형태 및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각, 은폐, 차단 등을 통한 프레이밍에 인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한편, 초등학교 교과서는 어린 세대에게 국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고 전달하는 직접적 수단으로서, 매우 단순하고 선명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이 논문은 어떻게 세 영역에서의 이산가족 관련 담론들이 서로 참조적으로 접합되어 인도주의를 정치화하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인도주의화하는 특정한 ‘진실’들을 생산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세 영역의 이산가족 관련 담론을 분석하는데 필자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담론에 대한 논의, 그리고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오리엔탈리즘’ 분석에서 ‘자아’ ‘타자’ 생산과정에 대한 논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L'archéologie du savoir)』에서 담론의 구성적 성격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광기에 대한 분석에서 그는 ‘광기 그 자체’에만 주목해서는 정신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신병 자체가 “그것에 이름 붙이고, 분

류하고, 기술하고, 설명하며 그 발전을 쫓아나가는 그 모든 진술에서 말해지는 것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담론이 사회적 실천이며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⁸⁾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분석하면서 푸코가 제안한 이와 같은 담론의 구성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타자’에 대한 담론이 단지 타자만이 아닌 자아도 구성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의 경험과 관점에서 ‘동양’을 타자로 구성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타자는 유럽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⁹⁾

이와 같은 논의를 염두에 두고, 반공주의에 의해 프레임된 이산가족에 대한 지배적 이해가 생겨나게 된 사회적/역사적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필자는 이산가족에 대한 담론이 단순히 이산가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의 성격을 창조하고 구성하였음을 드러낼 것이다. 한편, 이 과정은 북한과 관련하여 복잡한 형태로 남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남한 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 때문에, 이산가족 이슈는 종종 민족분단의 이슈로 번역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산가족 담론은 반공담론에 의해 프레임되어, 남한을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 그리고 북한은 비인간적이고 악마적인 사회로 구성하였다. 즉 이산가족 관련 담론에서는 남한에서 가족의 중심성/중요성에 대한 담론 자체가 분단 담론으로 작동하였다. ‘한민족’ 그리고 ‘통일’ 담론은 이러한 그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종종 두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억압적 공산당’과 ‘억압받는 북한 동포’가 그것이다. 공산당에 독점적 행위자성을 부여

8) Michel Foucault, *The Archaeology of knowledge*(New York: Pantheon Books, 1972), p.32.

9) Edward Said, *Orientalism*(New York: Vintage Press, 1978).

함으로써 남한 담론은 북한 사람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묘사하였고, 남한에게 가족 재회와 민족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구분이 항상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북한 공산당이 인민들을 세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도 종종 기술되었기 때문이다.¹⁰⁾

그런데 필자는 이산가족과 북한 관련 지배적 이해가 분단정치의 문법 속에 존재함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헤게모니가 정태적이거나 안정적인 것은 아님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푸코의 담론 개념에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헤게모니 이론을 결합시킨 리사 로우(Lisa Lowe)의 논의는 이 점에서 유용하다.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생산된 담론의 헤게모니적이고 중립화하는 양상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그녀는 다양한 영역과 시간에 걸친 ‘담론적 이종성(discursive heterogeneity)’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다른 접합의 가능성을 담보한다.¹¹⁾ 그의 제안에 기대어, 필자는 지배적 이산가족 담론에서의 이종성과 모순성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10) 전효관,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지,” 『탈분단 시대를 열며』(서울: 삼인, 2000); Richard R. Grinker, *Korea and its Futures: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11) Lisa Lowe, *Critical Terrains: French and British Orientalism*(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3. 이산가족 이슈의 형성과정

1)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문제의 진화

이산가족 관련 남한의 대북제안과 남북대화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남한이 이를 ‘순수한 인도주의 문제’로 다루어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남북대화의 가장 주요한 주제 중 하나였던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양자의 더욱 더 큰 정치적 관심사와 항상 연관되어 있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남북대화의 역사를 분석한 제임스 폴리(James Foley)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이슈가 남북한 사이 더 큰 정치적 이슈와 관련되어왔다고 주장한다.¹²⁾ 첫째, 이 이슈는 오랫동안 남북 간 ‘접촉의 주요한 통로’였다. 둘째, 이산가족 문제 관련 협상은 남북 간의 ‘지속적 대결, 정당성 획득과 각각의 통일정책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우열 관계를 반영해온 했다.¹³⁾ 이렇듯 폴리는 이산가족 이슈를 남북 간 정치적 지평 위에 위치시키기는 했지만, 남북한 ‘정부의 이해관계’와 ‘이산가족의 이해관계’를 대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주요한 관심사가 통일이거나 적어도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남북관계의 개선인 이산가족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안전 및 통일 관련 감정적 이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남북한 정부 간에 지속적 갈등이 존재한다.¹⁴⁾

12) James Foley, *Divided fami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13) *ibid.*, p.136.

14) *ibid.*, pp.135~136.

폴리의 “이해관계 이론”은 이산가족 이슈 관련 남북한 입장의 정치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반면, 이러한 대화의 구성적/생산적 측면에 대해서는 간과한 경향이 있다. 전효관이 남북한의 통일 담론과 관련하여 적절히 관찰하였듯이, 냉전 시기 이산가족 관련 남북한 간 대화 또한 많은 경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생산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상을 구축하기 위한, 나아가 내부의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 및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즉, 오랫동안 이산가족 관련 남북대화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소통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이산가족 관련 남북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전효관이 통일 관련 제안을 분석하면서 제시했듯이, 이산가족 이슈 관련 남북한 제안 및 대화 또한 “의사소통 의지가 없이 의사소통의 형식만을 갖춘” 담론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¹⁵⁾

이산가족 관련 남북한 대화가 어떻게 남북의 힘 관계 및 더 큰 정치적 관심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대화에서 활용된 담론이 어떻게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분단정치’, 전략인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산가족 관련 남북대화의 역사를 간략히 분석한다. 이 역사는 동시에 ‘이산가족’의 성격과 주체를 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1) 1950년대: 피납자 송환

남한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남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처음 제기한

15) 전효관, “남북한 정치담론 비교연구: 의사소통 구조와 언어전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318쪽.

것이 유엔사와 북한 사이 정전협정 협상 기간 중이었다고 주장한다.¹⁶⁾ 그러나 당시는 ‘이산가족’ 문제로서가 아닌, 전쟁 중 ‘공산당에게 납치되어 간 양민’을 지칭하는 ‘피납자’들에 대한 ‘송환’ 문제로 제기되었고 문제 제기의 주체도 남한 정부가 아닌 유엔사였다.¹⁷⁾ 정전협정 주체에서 남한 정부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¹⁸⁾ 한편 정전협정 협상 과정에서 1951년 12월 30일 유엔사 측이 처음으로 피납자 소재 파악과 송환을 요구하기에 앞서, 북한은 유엔 측에 납치하거나 강제이주시킨 북한 주민 50만 명을 귀환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¹⁹⁾

이후 정전협정에서 이 이슈는 양측 모두의 ‘실항사민’ 귀환 문제로 정리되었다. 허만호에 따르면 이는 미 국무성이 휴전협상 시작 전 유엔군 측 대표단에게 정전협상에서 남북 민간인 문제를 의제화하되 이들에 대한 송환 요청이 협상을 위협에 빠뜨리거나 정전 체결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논쟁화하지 않도록 지시한 데 기인한다.²⁰⁾ ‘실항사민’ 귀환이슈는 정전협정 제3조 59항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16)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서울: 대한적십자사, 1976); James Foley, *Divided fami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Choong Soon Kim, *Faithful Endurance: An Ethnography of Korean Family Dispersal*(Tucson, AZ: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7);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김귀옥, “이산가족의 범주화와 공동체 형성방안.”

17) 허만호, “6·25 전쟁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휴전회담: 납북자 명부와 휴전회의록 분석,” 『동서연구』, 제25권 3호(2013), 111~139쪽.

18)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의 첫 정전회담부터 약 2년의 줄다리기를 끝에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었다.

19) 허만호, “6·25 전쟁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휴전회담: 납북자 명부와 휴전회의록 분석,” 128쪽.

20) 위의 글, 128쪽.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 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이에 따라 1954년 한 차례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때 교환된 사람은 북측 19명 남측 37명으로 매우 소수였으며 북한의 경우 전원 외국인이었다. 이후 남한은 ‘피납자 문제’를 국제적십자사에 제기했다. 1954년 초여름,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문제와 월남문제를 위한 국제회의부터 실향사민의 송환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후 한국적십자사는 1955년 납북 인사 1만 7,500명과 미송환포로 2,200명의 소재와 송환을 주선해줄 것을 국제적십자사에 요청하였다. 또한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간 실향사민 재등록을 실시하여 7,034명의 명단을 새로 작성하여 국제적십자사에 이송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적십자사는 1957년 국제적십자사에 한국적십자사

와의 회담 주선을 요청하면서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안편지를 직접 교환하는 등 모든 문제를 일괄처리하고자 제안하였다. 한국적십자사는 남북 인사들의 안위 및 행방조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북측에 통보된 남북 인사 7,034명에 대한 소식을 알려달라고 대응하였다. 이에 북한적십자사는 남남 인사 1만 4,132명에 대한 행방 파악을 국제적십자사에 요청하였다.²¹⁾ 이후 두 측은 모두 상대방이 송환을 요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납치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왔다고 주장했다.²²⁾

남북 양측이 이 시기 상대측에 거주하는 ‘피납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경쟁적인 소재 파악 및 송환 운동을 펼친 것은, 피납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체제정당성 경쟁의 요인이 컸다. 즉 국제사회나 남북 각각의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상대방의 평판에 흠집을 내려는 목적이 컸던 것이다.

(2) 1960년대: 교착 상태

남한 정부는 1960년대에도 간헐적으로 국제사회에 피납자 송환 이슈를 제기하긴 했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북관계 관련 다양한 제안을 반복하는 가운데, 남한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고 북한의 제안을 선전전술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기에는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경제적 열세에 있었고 또 정치적 불안정성이 컸기 때문에 남한 정부는 북한과 연루되고 싶지 않았다.

21)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98~101쪽.

22) Choong Soon Kim, *Faithful Endurance: An Ethnography of Korean Family Dispersal*, p.100.

(3) 1970년대: 이산가족 문제의 대두

1970년대는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관계에서 공식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남북한 간의 첫 ‘직접적’ 적십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의 주요한 의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었다. 이는 1971년 8월 12일 남한의 대한적십자사 총재인 최두선이 내외기자 백여 명을 초대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금세기 인류의 상징적 비극”이자 “순수한 인도적 문제”로 정의하고 적십자회담을 제안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²³⁾ 이 성명은 1970년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8·15 선언”에 바탕을 두었다.

8·15 선언은 남한으로서는 첫 공식적 남북대화 제안을 포함하고 있었다.²⁴⁾ 풀리는 8·15 선언의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미중, 미소 간 화해의 기미가 보이는 등 냉전 질서의 재편이 진행되는 국제 질서에 일정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시기 즈음에는 경제적으로 남한이 북한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셋째, 박정희 정권의 억압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다른 이슈로 무마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8·15 선언을 통해 박정희 정권은 북한과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통치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통일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활용하고 반대자들을 억압하려 했다는 것이다.²⁵⁾ 이 선언은 북에 대한 적대적 언어와 북이 이 선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많은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과연 이 선언의 실제적 목표가 남북한 간 대화를 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변화하는 국내의 정세 속에서 정권의

23)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269쪽.

24) 위의 책, 230쪽.

25) James Foley, *Divided fami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pp.153~156.

안위를 위한 정치게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남한이 남북한의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처음 공식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71년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특별성명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그 몇 달 전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회담을 열자는 제안을 한 데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남한의 제안에 대해 북한은 이틀 후인 8월 14일 남한이 제안한 어젠다가 “북남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친척, 친우들의 절절한 염원에 비추어 볼 때 다만 가족찾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북남조선 전체인민들의 공통적인 염원과 인도주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준비회담에서 다룰 안건을 확장하자고 역제안했다. 확장된 내용에는 이산가족의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친우까지 범위 확장,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방문” 실시, “자유로운 서신교환 실시”, 그리고 가족을 찾아주고 상봉을 마련해주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⁶⁾

이후 남북한 간 긴 줄다리기를 끝에 1972년 6월 16일 20차 예비회담에서 5개항의 본회담 의제를 채택하였다. 5개항에는 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③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④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⑤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남북이 제안한 안들을 일정 정도 절충한 합의안이었다. 이러한 예비회담 결과에 기반을 두어 남북적십자 제1차 본회담이

26)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272쪽.

1972년 8월 30일 평양 대동강 회관에서 개최되었고 양측 수석대표는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5개항의 의제를 본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재 확인하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 어주기로 하였다.²⁷⁾ 이후 본 회담이 몇 차례 더 이루어졌으나, 남북은 이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매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남한은 “적십자사의 책임하”에 “적십자 본질을 저해할 요소를 배제하고” 이산가족 문제만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민족화목과 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하에 “적십자 사업을 온 민족적 사업으로 추진시켜나가는 인도주의 원칙을 구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법률적,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개선”을 비롯한 통일 환경 조성 과 같은 좀 더 큰 이슈와 관련 지어 논의할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²⁸⁾ 남한은 이에 대해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적십자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한 인도주의 정신”에 기반을 두어 이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남한의 입장과 대비시켰다.

한편 7차까지 이어진 본 회담은 1973년 북한이 김대중 납치사건을 비판하며 모든 남북회담을 중지하기로 선언함으로써 결실 없이 끝났

27) 남북회담본부 회담 자료실(<http://dialogue.unikorea.go.kr/home/data/talksummary/view>, 검색일: 2015년 8월 1일).

28) 북한은 “법률적 조선과 사회적 환경의 개선” 이슈를 회담이 지속됨에 따라 점점 구체화시켜나갔다.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방문하고 상봉하기 위해서,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반공입법 폐지, 반공기관과 단체 해체, 일체의 반공활동 금지,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 북에서 남으로 오는 사람들과 관계자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통행 등 활동의 자유와 편의를 제공하고 인신과 휴대품의 불가침권을 보장하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북한은 최고의 인도주의 사업은 조국통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298쪽.

다. 그러나 이 시기 적십자회담은 1972년 역사적 남북공동성명을 준비하는 채널로 활용되기도 했다. 본 회담의 중단 이후, 비공식적 대표 접촉, 본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회의 등으로 이어지던 남북한 적십자사 간 접촉은 1978년 북한이 남한에 대해 “인도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북한은 그해 3월 진행된 한미합동 군사훈련 팀스피리트 78을 문제 삼았다. 북한적십자사회의 대남통지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국의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함께 방대한 병력과 대량 살육무기 등을 동원하여, 적십자 실무회의가 열릴 판문점 일대를 중심으로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회담 상대방에 대한 전면공격을 가상한 대규모의 한미연합작전훈련을 벌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 정세를 한층 더 전쟁접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인도주의 회담의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고, 나라의 긴자상태를 격화시키며,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무분별한 전쟁광증으로서, 숭고한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과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²⁹⁾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도 북한 측의 태도를 인도주의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비판한다.

우리는 한미연합작전훈련이 남북적십자사실무회의를 연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귀적십자회의의 이와 같은 부당한 회의 연기 통고

29) 평양방송, 1978년 3월 19일;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2』, 33쪽에서 재인용.

는 쌍방 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처사인 동시에 송고한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과 1천만 이산가족들의 염원마저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³⁰⁾

남북이 모두 ‘인도주의’라는 레토릭을 사용하며 서로를 비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회담이 중단되기까지 남북한은 ‘인도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중심으로 경쟁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남한이 이 시기 최초로 이산가족 관련 적십자회담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은 남한이 북한보다 이 이슈에 전향적이며 따라서 좀 더 ‘인도주의적’이라는 역사적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후 남북관계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비난으로 점철되었고, 1984년 북의 제안으로 남한에 대한 수재물자 인도를 위한 적십자회담이 재개되고 이후 1985년 이산가족 관련 적십자회담으로 이어질 때까지 모든 적십자회담은 중단되었다.

(4) 1980년대: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

1980년대에는 남북 간 첫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이산상봉의 장은 화해의 장이라기보다는 경쟁의 장이었다. 동시에 실향민이 이산가족 이슈의 주체로서 이산가족 담론에 기여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985년 여름 재개되었는데, 1984년 북한의 남한 수해 지원 물자 제공이 일정 정도 기여했다. 사실 북한의 남한 수해지원은 남북한 관계의 역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 전에도 남북 간 경제적 지원 제의는 있었지만, 이는 제안하는 쪽의 우월성을 과시

30) KBS 라디오, 1978년 3월 20일;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2』, 34쪽에서 재인용.

하기 위한 제스처로 여겨졌고 따라서 상대방은 늘 이를 거절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수해지원 제안 또한 그 한 달 전 남한 전두환 대통령의 하계 기자회견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 측이 동의한다면 북한 동포들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북한은 이를 북한 사회를 얽잡아 본다고 비판하며 거절하였으나 이후 서울 일대에 큰 수재가 발생하자 수재물자 제공을 역제외하고 나온 것이다.

남한은 처음에 이를 거절했다가 며칠 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는 “물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동족 간에 인도적인 문제에서부터 진정한 상부상조의 길을 트고, 나아가서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데 그 참뜻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남한도 인도적 차원에서 물자제공을 아끼지 않을 것임도 천명하였다.³¹⁾ 북의 지원을 받아들인다는 스스로의 결정이 공여자-수해대상의 위계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 혹은 위계관계에서 아래쪽에 놓일 위험을 무릅쓰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는 의미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³²⁾

수해지원과 관련한 적십자회담은 1985년 9월 분단 이후 첫 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졌다. 회담은 남북적십자 간 수재물자

31) 대한적십자사, 위의 책, 54~57쪽. 폴리는 남한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인 데에는 남한이 표명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와 더불어, 1986년 개최 예정이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제안한다. James Foley, *Divided fami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p.171.

32) 그러나 막상 북에서 수해지원물자가 도착했을 때, 남한의 언론들은 남북한의 경쟁 논리 위에서 물자의 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인도 인수 작업이 종료된 1984년 10월 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중단 상태에 있는 남북적십자본회담의 재개를 제의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에 북적 위원장이 화답함으로써 재개되었다.³³⁾ 그러나 그 과정은 험난했다. 북한은 이산가족의 ‘자유 래왕(자유 왕래)’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선결적’이고 ‘중핵적’인 문제라고 제안하는 동시에 남북적십자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복 40년을 맞이하는 1985년 8월을 기해 남북 적십자사 총재들이 적십자 회원들로 구성된 100명 정도의 예술공연단을 대동하고 교환 방문을 실시하여 축하공연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은 자유왕래에 대한 강조가 “인도주의 사업에서 과거와 같은 정치적 전제조건을 제기”하고 남한의 “내부문제를 시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명하였고 공연단 교환공연에 대해서는 “적십자회담에서 거론될 사항이 아니며 시의에도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³⁴⁾ 이어 남한이 소규모의 상봉단에 대해 고향방문을 허용하자고 제안하였고, 북한을 이를 평양과 서울에 한정시키자고 역제안하였다.

오랜 협상 끝에 남북은 상봉단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었는데, 50명의 고향방문단과 50명의 예술공연단을 교환하기로 한 것이 최종 내용이었다. 이 고향방문단은 평양과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었고, 남북한 50명씩의 방문단 중 북측 방문단 30명, 그리고 남측 방문단 35명만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방문단은 남북 모두, 상대방

33)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2』, 71쪽.

34)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2』, 92쪽;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94쪽; 남북회담본부 회담 자료실(<http://dialogue.unikorea.go.kr/home/data/talksummary/view>, 검색일: 2015년 8월 1일).

측 출신 중 면밀한 기준하에 선별한 사람들이었다. 북한 측 사절단의 경우 남 출신 월북자, 남한 측 방문단의 경우 북 출신 실향민이 그들이었다.³⁵⁾ 회담 과정에서 회담이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남한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남한은 ‘인도주의적 입장’에 서 있음을 강조했지만, 남북 간 경제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일정한 자신감에 기반하고 ‘인도주의 정신에 기반을 둔 적십자 회담’이라는 장의 특성을 의식하면서 그 언어는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었다. 적십자회담은 1986년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요구하면서 다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산가족 이슈가 크게 주목받은 시기였다.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가 실향민 조직들에 의해 1982년 조직되었고, 1983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TV프로그램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³⁶⁾ 이후 남한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무사히 치렀으며 1987년 민주화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냄으로써 일정 정도의 민주화를 이루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의 쇠퇴와 세계적 탈냉전의 분위기에서 소외를 겪기 시작했다.

(5) 1990년대: 이산가족 이슈의 탈중심화

1990년대 이후 이명박 정권 이전까지는 이산가족과 관련한 적십자 회담이 더 이상 남북 간 대화의 주요한 창이거나 남북한 간 경쟁의 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냉전의 흔적이 여전히 남긴 했지만, 대화와

35) 한국 전쟁 중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직접 인용이 아닌 경우 2015년 현재 주로 사용되는 “실향민”으로 통칭한다.

36)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디어 담론을 다룰 때 논의한다.

화해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이에는 국내외적 환경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우선 남한의 민주화와 경제적 성공이 북한 관련 이슈에서 자신감을 갖게 했다. 또한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남한은 1990년 소련과, 1992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연계를 확대해 나갔다. 반면에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1년 남북은 UN동시 가입을 결정했고 총리급 회담을 열어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의 18조에는 남북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그 결과 1992년에는 이산가족재회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었다. 이후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와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말미암아 회담은 다시 중단되었다. 1993년 이후 남북한 국내 및 국제적 환경에 따라 남북관계는 변동이 컸으나 다양한 교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산가족 이슈는 정권 차원에서 더 이상 대북경쟁이나 반공의 어젠다로 활용되지 않았다. 정치경제적으로 명백한 우위를 차지한 남한 정부가 남북회담을 대북공세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어젠다로 삼을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1995년부터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북한에 대한 지원 이슈가 남북한 적십자회담의 주요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인도주의’ 담론의 중심을 차지했다.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대체로 이 시기 이후 남한 정부는 ‘형식’과 ‘내용’ 양 측면에서 대북소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³⁷⁾ 그러나 남북이산가족 관련 회담은 19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한편 1988년 남한 정부가 민간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접촉을 승인함에 따라 대부분 실향민인 일부 이산가족이 재미한국인이나 조선족을 통해 북의 가족을 접촉하고 중국 등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2) 미디어에 재현된 이산가족³⁸⁾

권위주의 시대 한국 언론은 정부에 의해 엄격히 감시받고 통제되었고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매우 제한되었다. 분단 상황에서 남북관계라는 영역은 더욱 주요한 통제의 영역이었고,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정권의 의도에 충실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³⁹⁾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가족 이슈는 1971년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적십자 회담 제안 이전에는 미디어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1953년 이후 정 전협정에서 결정한 실향사민송환 관련 기사와 남북자 관련 기사가 일부 소개되긴 했지만, 이는 ‘이산가족 문제’로 프레임되지 않았다. 이 시기 미디어 담론에서는 전쟁으로 이산을 겪은 사람들을 ‘공산당에 의한 피납자’에 한정시키는 시도와 더불어 월남민에 대해 북한체제가

37) 이러한 상황은 대북 강경정책을 채택한 이명박 정부 이후 다시 변화하였다.

38) 언론기사는 기사의 DB화가 완료되어 옛 신문의 키워드 검색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하고, 날짜별 PDF 자료 검토가 가능한 다른 신문 등을 보조로 활용하였다.

39) 양승목,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개혁,” 『언론정보연구』, 41권 1호(2004), 61~89쪽.

싫어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찾아 남한으로 온 ‘자유 투사’라는 특징을 부여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었다. 남한 정권이 ‘피납자’들에 대한 대대적 등록 운동을 벌이며 이들의 귀환을 막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는 동시에, 월남민들을 ‘반공자유투사’로 소개하며 이들의 수가 북으로 간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미디어도 관련 기사를 쏟아내었다. 북으로 간 사람들은 ‘피납된’ 사람들이고 남으로 온 사람들은 ‘자유 투사’라는 이러한 정식화는 남북 경쟁구도에서 남을 북보다 나은,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 재현하는 하나의 ‘분단정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미디어는 이러한 국가 어젠다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데 톡톡히 기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북으로 갔다고 정의되는 ‘월북자’나 그 가족들을 위한 공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산가족’이라는 제목 및 주제 키워드로 찾은 남북한 관련 첫 기사는 1971년 8월 13일, 남한 적십자사가 이산가족 관련 첫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안한 다음날이었다. 이날 『조선일보』는 몇 개의 관련 기사를 실었다. 한 기사는 적십자회담 제안의 함의를 논의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이산가족 이슈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이 기사는 이 문제가 더 큰 이슈인 통일과 연결되어 있으며 북한 정권이 제기한 남북관계 관련 다양한 제안의 ‘진정한 의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그 동안 북괴의 태도는 ...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한 후에 남한에서 인민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었는데 지난 6일 북괴가 남북한 회담대상에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을 포함시킨 것은... 종래에 그들이 해오던 허구

적인 선전행위의 일환일 것이 분명한데 북괴가 적십자사 회담제의를 받아들이느냐 혹은 거부하느냐의 태도여하는 바로 이러한 북괴발언의 허구성이 어느 정도냐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이에 덧붙여 기사는 북한이 이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남한처럼 “순수하게 인도적인 입장에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적십자회담 제안 시 사용된 언어에서는 형식적이나마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미디어 담론은 처음부터 북한이 이 대화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기사는 “망향 20년: 500만 월남동포의 어제 오늘”이라는 기사를 통해 실향민들이 “내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을 기원하면서 진정한 인간적인 반응을 누구보다 애타게 고대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동시에 이 기사는 실향민들의 반공주의적 성향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지옥’을 피해서 남한으로 왔으며 ‘북괴’에 반대해서 싸운 전위들이었다. 동시에 이 신문은 ‘남북 동포의 귀환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소개하며 북한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기사도 싣고 있었다.⁴¹⁾ 이러한 기사들의 내러티브 전략은 전형적으로 인도주의의 문제와 반공주의를 접합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을 비인도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다. 이 기사들에서 주목할 점은 실향민만이 이산가족 이슈에 있어 적절한 주체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1년 이후 대부분의 이산가족 재회 관련 신문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도 반공주의에 깊게 침윤되어 있었다. 이들 중 다수가 매우 감정

40)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41) 『조선일보』, 1971년 8월 13일, “망향20년: 500만 월남 동포의 어제 오늘.”

적인 요소나 장면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남한 정부와 그 이데올로기적 기구인 미디어는 이러한 감정의 힘을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복속시킴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관련 지나친 감정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1983년 KBS에서 진행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남한 사회 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유효한, 운동이었다고 평가된다. 원래 1983년 6월 30일 하루 95분 방송으로 기획되었던 이 프로그램은 그 인기와 효과성으로 말미암아 1983년 11월 14일까지 138일 453시간 35분 규모로 확장되었다. KBS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두 1만 189가족이 재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⁴²⁾ 감동적이고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촉발하는 가족상봉 장면들은 국내외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남한 정부로 하여금 더욱 남북적십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했으며 북한에도 압력으로 작용하여 1985년 첫 남북이산가족 상봉 성사에 기여하였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도 매우 뚜렷하게 반공주의 레토릭에 프레임되어 있었다. 개별 이산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애초에 가족이산이라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킨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상봉의 크레딧을 남한에 주는 방식의 내러티브가 반복되어 전달되고 했다. 『조선일보』의 한 사설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KBS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산가족의 비극적 스토리와 가족 재회에 대한 열망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 기사는 북한을 “비인간”, “반인도”, 그리고 “천심을 거역하는” 존재로 비판한다.

42) 한국방송공사,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서울: 한국방송공사, 1984).

공산당이란 이러한 갈망을 한낱 [감상적]이라고 비웃는 [주의자]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도 이산가족들의 함성은 서울을 감동시키고 세계에 충격을 던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북한의 폐쇄장벽에 인간·인도·천심의 우뢰소리를 때리고야 말 것이다.⁴³⁾

KBS 자체도 이 방송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반공 교육의 장”으로 명시한 바 있다.⁴⁴⁾⁴⁵⁾ 1985년 분단 이후 첫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미디어 재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 이슈로, 그리고 남북 간 첫 민간인 교류로 의미화하면서도 남한 미디어는 이 상봉에 대한 크레딧을 북한에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이 이산가족 재회 이슈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상봉 동의 또한 기존의 반공주의 프레임 속에서 설명되어야 했다. 따라서 미디어는 북한의 ‘정치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한국일보』는 상봉에 동의한 북한의 ‘의도’에 문제제기를 한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했다. 그는 북한의 동의를 남한의 적화라는 대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무력전쟁을 통한 적화통일전략’에서 ‘정치

43) 『조선일보』, 1983년 7월 3일, “누가 천륜을 막을까: 감격의 이산가족 재회와 남북.”

44) 한국방송공사,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30쪽.

45)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필자의 기억에 뚜렷이 남은 장면이 있는데, 가족을 확인하고 울고 있던 한 이산가족에게 진행자가 “대한민국만세”를 외치라고 속삭이자 그 가족이 따라하는 장면이었다. 통곡하면서 남한국가에 감사하는 가족들의 이미지가 이산가족의 비극, 북한 땅에 대한 불법적 점유, 6·25 전쟁, 여전한 남한 사회의 적화야욕 등 이슈 관련 북한에 대한 미디어 재현과 맞물리면서 남한을 선, 북한을 악으로 구성했다. 당시 필자는 방송을 보고 신문을 읽으면서, 이산가족에 대한 슬픔, 재회한 가족들에 대한 안도, 공산당에 대한 분노,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 등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었다.

전쟁'으로 바꾼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적교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저들(북한 공산당의 회유공작)이라고 지적하며 “고향의 부모 형제들을 만나도록 해주고는 여기서 함께 살자는 유혹과 세뇌공작을 병행할 것이 뻔”하므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⁶⁾

실제 상봉 장면도 눈물과 기쁨만큼 당혹과 한탄이 교차하는 순간으로 재현되었다. 감동적인 상봉 장면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미디어는 남측 상봉 가족이 북측 가족들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혹은 “북한 정보요원의 눈이 무서워” “그 옛날의 혈육 모습은 없었던 것을 발견하고 통탄했음을 전했다.⁴⁷⁾ 예를 들어 1985년 9월 22일 『한국일보』는 “달라진 마음… 말문도 막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초래한 당혹스러운 장면을 소개했다. 이 기사는 상봉의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북측 가족들은 “수령님 은덕”으로, 남측 가족들은 “하느님 은혜”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대조하면서 남측 가족들의 당혹감을 전하였다. ‘하느님’과 ‘천당’을 부정하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세뇌’되었거나 ‘감시의 눈초리’ 때문이라고 해석하면서 ‘달라짐’의 책임을 북한에 두었다. ‘이질’ 혹은 ‘달라짐’은 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상징하는 주요한 단어 중 하나로서, 그 책임은 북한 공산당에 있는 것이다.

평양으로 가족을 만나러 간 남측 이산가족들은 귀환 후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목격자이자 증언자로 묘사되었다. 북한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북한은 “한국

46) 『한국일보』, 1985년 6월 2일, “고향방문 등 남북한 교류 장래는: 40년 이산한 풀릴까.”

47) 『조선일보』, 1985년 9월 22일, “어머니… 오빠… 목멘 ‘40년 한’.”

적인 것”을 거의 잃어버린 “이데올로기로 둘러싸인 요새”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대체로 북한 동포들을 구해내어야 하는 남한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서울신문』은 1985년 9월 24일 자 기사에서 귀환 평양방문단의 소식을 전하며, “그리던 고향은 아니었다”라는 제목에, “‘잘 산다’는 허세는 오히려 측은”이라는 부제를 달아, 평양을 방문하여 가족을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감을 느꼈는지 전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사회”, “북한 사람들이 상부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는 등의 소감과 더불어 북한에 가 보니 “우리가 얼마나 살기좋은 나라”인지 깨달았고 “다시 애국자가 된 기분”을 느꼈다는 감상도 전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쟁적 시각을 드러내었다.⁴⁸⁾ 흥미롭게도, 서울을 방문한 북측 이산가족들은 모두 월북자였는데 언론에서는 월북자나 그들의 가족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1980년대에도 남한의 이산가족 이슈 지형에서 월북자 가족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남한이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1980년대 후반까지 이산가족 이슈는 주로 반공주의 담론 안에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재현된 이러한 이벤트와 스토리 구조 안에는 전복적 요소가 잠재되어 있었다. 눈물겨운 상봉 장면, 이산가족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는 반공주의 프레임에 완전히 포획될 수 없었다. 국가와 미디어가 이들을 반공주의 담론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 프레임을 넘어서는 감정이 항상 존재했는데 이 감정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를 포괄하는 민족주의적 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2000년의 남북화해와 이산상봉 상황에서 그러

48) 『서울신문』, 1985년 9월 24일, “그리던 고향은 아니었다.”

한 힘으로 작용했다.⁴⁹⁾

1980년 후반 남한의 민주화와 진보적 언론매체의 창간 이후부터는 이산가족 이야기가 반공주의로부터 탈구(disarticulation)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수주의 미디어는 이를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도구로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경우, 1999년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기로 한 한국적십자사에 동참한 남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관련 진전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호혜성’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산가족 상봉 없이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⁵⁰⁾ 이렇듯 민주화 이후 미디어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산가족 이슈를 상이한 담론들과 접합하여 재현하고 있다.

3) 교과서에 재현된 이산가족

학교 교육은 이산가족 담론이 남한의 젊은 세대에게 전해지는 또 다른 주요한 영역이었다. 권위주의 정권하 초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산가족 담론이 6·25 전쟁, 북한 사회의 가족 붕괴, 그리고 반공 평화통일 등의 담론과 접합되어 주요한 반공교육의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리처드 그링커(Richard Grinker)는 교육을 “특정한 통념적 관점의 민족성/국가성을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도구”라고 분석했다.⁵¹⁾ 반공주의와 반공주의에 기반을 둔

49)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글을 참고하라. 이수정, “‘탈냉전 민족 스펙터클’: 2000년 여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민족문화연구』, 59호(2013), 95~122쪽.

50) 『조선일보』, 1999년 3월 13일, “사설: 상호주의 포기한 대북비료.”

통일이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남한 민족/국가성의 기본적 토대였다. 국
정교과서는 이러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었
다. 미디어에 재현된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공 이데올
로기에 의해 전부 그리고 항상 침윤될 수는 없었던 반면, 교과서는
단한 포맷으로 반공주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강화하는 뚜렷
한 정치적 목적을 나타내었다.

1953년 휴전 이후 도덕이 반공 교육을 위한 주요 과목이었다.⁵²⁾
도덕 교과서는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 공산당의 잔혹함과 비열함,
공산정권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일상생활, 납치와 간
첩남파 등을 통해 남한 주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행태 등을
포함하여 북한 공산당을 극단적으로 불신하고 악마화하는 묘사로 가
득했다.⁵³⁾ 남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로 간주되는 가족
이 북한 사회의 ‘비인간적 성격’을 비판하는 결정적인 도구로 등장했
다. 북한 공산당은 삼촌, 아버지, 할아버지,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죽이거나 납치하는 ‘가족파괴자’로 묘사되었다. 북한은 또한 주민들
로 하여금 가족을 포기하도록 하는 곳으로 그려졌다. 도덕 교과서는
가족 간 친밀성, 효성,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제사 등 남한의 가족 가치
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치
밀하게 드러내도록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분리되어 탁아

51) Richard Grinker, *Korea and its Futures: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 p.136.

52) 시대에 따라 구체적인 교과목 이름은 ‘초등도의’, ‘바른생활’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53) 분석의 대상이 된 교과서는 문교부가 출간한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로서 출간년
도와 학년은 다음과 같다. 1962(2-2), 1963(1-1, 1-2 2-1, 2-1), 1964(3-1, 3-2,
4-1, 4-2, 5-1, 5-2, 6-1, 6-2), 1979(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1982(2-1, 3-1, 4-1), 1983(6-2), 1988(3-2), 1989(3-1, 3-2, 4-1, 6-2),
1990(4-1, 6-2), 1993(1-6), 1998(1-3).

소에서 성장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부모를 선생에게 고발하는 아이들 이야기, 제사를 봉건적 전통 혹은 미신이라고 간주하여 금지했다는 얘기 등이 반복적으로 소개되었다. 다른 한편, 공산정권하에서의 삶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지속적으로 북한 공산당에서 북한 주민을 구분해내었다. 북한 주민들은 공산정권하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동포로,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로 그려졌다. 교과서의 북한 관련 지문은 종종 공산당을 무찌르고 통일을 이루어 북한 동포를 구해내겠다는 화자(대체로 초등학교)의 결심으로 끝났다.

이 중 많은 얘기의 주인공 어린이에게는 북한에 있는 가족이 있다. 1980년대 이산가족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때까지 명시적으로 ‘이산가족’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산가족들이다. 대체로 두 종류의 이야기로 나뉘는데, 첫 번째 종류는 아이의 가까운 친척 중 한 명이(대체로 할아버지나 삼촌) 6·25 전쟁 중에 공산당에 의해 납치된 경우다. 예를 들어 1962년 2학년 교과서는 전쟁 중 납치된 할아버지를 가진 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⁵⁴⁾ 1964년 3학년 교과서는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납북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시는 가족을 소개한다.⁵⁵⁾ 이러한 이야기들은, 북한 사회에서의 가족 붕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가족을 파괴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는 북한 공산당의 비인간적 행태를 비판하는데 활용된다. 두 번째 종류는 가족을 북에 두고 떠난 친척을 가진 아이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1964년 3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이야기는 매우 전형적인데, 아이가 아버지에게서 할머니가 북한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54) 문교부, “5. 할아버지의 생신,” 『도덕 2-2』(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2).

55) 문교부, “8. 파랑대문집,” 『도덕 3-1』(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4).

날이 할머니의 생일이라서 아버지가 굶주림과 강제노역, 지속적인 상호감시가 만연한 ‘지옥 같은’ 북한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할머니를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이야기는 소년이 북한에 있는 할머니와 아이들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며, 남한 주민으로서의 행복을 느끼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⁵⁶⁾

유사한 이야기는 1970년대 교과서에서도 반복된다. 1979년 발간된 3학년 교과서에는 한 아이가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글 형식의 지문이 등장한다. 늙은 할아버지를 보내주지 않고 노인들까지 일터에 끌려 나가 고된 일을 시키는 공산당에 대한 원망, 할아버지를 걱정하여 눈물 흘리는 할머니에 대한 묘사, 셋집에 살다 새로 집을 구한 작은 아버지 소식, 큰 공장과 고속도로로 상징되는 남한의 발전상 소개 등으로 이어진 이 글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우리나라가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때, 남북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대요. 그 때에는 우리의 고속도로가 휴전선을 뚫고 북한 땅 어디에나 뻗어 올라 갈 거예요. 하루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부디 몸조심하시고 오래오래 살아주세요.⁵⁷⁾

6·25 전쟁 직후부터 시작된 이러한 비극적 가족 이야기는 북한 공산당의 잔혹함에 대한 묘사 및 화자의 공산당 척결 의지, 그리고 남한의 발전상에 대한 자부심 등의 메시지와 함께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었다.

이후 ‘이산가족’이라는 프레임 자체는 남한 사회에서 이산가족 이

56) 문교부, “15. 할머니의 생신,” 『도덕 3-1』(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4).

57) 문교부, “15. 할아버지 들으세요,” 『도덕 3-2』(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9).

슈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1980년대 나타나기 시작했고, 납북자가 아닌 실향민이 이산가족 이야기의 주요한 주인공들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82년 4학년 도덕 교과서에는 “홀어진 가족의 슬픔”이라는 단원이 포함되어 있다. “아름다운 한반도”와 “민족분단의 비극”에 대한 대비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남한을 침략하여 분단을 영구화한 북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슬픔을 소개하고, 또 한 번의 전쟁을 기획하고 있는 북한의 야욕과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는 남한의 노력을 대비한다.⁵⁸⁾ 그다음 단원은 북한에 부인과 아이들을 두고 온 실향민인 “통일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다. 30년 동안 그는 가족을 잊은 적이 없다. 통일이 되어 가족과 재회하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이후 통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 휴전선 근처 작은 마을로 이사를 했고 험벗은 산에 나무를 심고 길을 넓혔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에 회의적이었지만 몇 년 후 나무에 과실이 열리고 넓어진 길로 차가 다니게 되자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통일 할아버지’로 그리고 그가 만든 길을 ‘통일로’로 이름 붙였다.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주는 다음과 같은 교훈으로 끝이 난다. “통일이란 누가 가져다주는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여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게 되면 통일의 날은 반드시 앞당겨지게 될 거야.”⁵⁹⁾ ‘통일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개발주의와 반공주의라는 당시 남한 국가 이데올로기에 따라 쓰였고 할아버지는 강력한 국가 주체로 묘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교과서에 묘사된 이산가족의 감정적 고통이 북한 공산정권에 대한 냉

58) 문교부, “홀어진 가족,” 『도덕 4-1』(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2).

59) 문교부, “통일 할아버지,” 『도덕 4-1』(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2).

정한 비판이나 남한 국가에 대한 칭찬 혹은 감사함을 흠집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1983년 6학년 교과서의 한 단원은 이산가족이자 실항민인 할머니(철수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후, 남북적십자회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담에 대한 철수의 기대와는 달리, 회담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할머니는 “북한 공산당은 워낙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들이라 잘될까 걱정”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후 회담이 또 깨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북한 공산당이 왜 흩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자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철수의 질문에 아버지는 길 다르고 속 다른, 즉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무장공비를 남파시키고 땅굴을 파는 등 전쟁준비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비판한다. 이후 이 이야기는 북한의 무력적화통일과 남한의 평화통일을 대비시키며 평화통일을 위한 남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⁶⁰⁾ 남한의 인간적/인도주의적 입장과 북한의 비인간적/반인도주의적 모습을 대비하며 반공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이산가족과 적십자회담이라는 소재가 활용된 전형적인 경우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1990년 교과서 개정과 더불어 교과서의 반공주의 색채는 옅어지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6·25 전쟁에 대한 책임, 나라를 지켜야 할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지만, 남북이 한민족이며 서로 협력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가족 이슈 또한 반공주의로부터 일정 정도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90년 6학년

60) 문교부, “8. 평화통일,” 『도덕 6-2』(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3).

교과서의 한 단원에는 어머니의 고향이 북한인 아이가 등장하는데 그 아이는 남북한이 서로 문을 활짝 열어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는 것으로 소개된다. 이러한 내러티브에서는 이산가족이 화해와 통일의 동력으로 구성된다.⁶¹⁾

5. 나가며

지금까지 남북대화, 미디어, 초등학교 교과서의 이산가족 재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필자는 민주화 이전 남한 사회에서 이 이슈가 어떻게 구성되어왔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남한의 민주화와 더불어 시작된 변화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세 영역에서의 담론을 더불어 살펴보면 납북자와 실향민의 이야기가 남한의 우월성과 북한의 문제성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던 1950년대 및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 제안과 더불어 직접적 “이산가족” 프레임에 의한 담론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KBS의 이산가족 찾기 방송 및 첫 남북이산가족상봉과 더불어 이 담론이 활성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월남민/실향민이 이산가족 이슈의 유일한 수혜자이자 주체로 생산되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영역의 성격에 따라 담론의 양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남북대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대화의 제의 및 협상 자체의 맥락이 항상 더 큰 정치적 이슈 및 남북의 권력관계와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슈의 대상을 월남민/실향민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61) 문교부, “10. 하나되어 사는 길,” 『도덕 6-2』(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0).

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관련 담론은 북한, 남한 내부, 국제사회를 청자로 하고 적십자회담이라는 형식을 빌려 진행되었기 때문에, 노골적인 반공주의 보다는 ‘인도주의’ 언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산가족 문제를 ‘순수한 인도주의 문제’로 정의하고, 북한과의 협상이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정치화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언어전략을 구성하였고, 그 효과는 북한을 ‘정치화, 반인도주의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효과가 증폭된 것은 미디어와 교과서를 통해서였다. 미디어와 교과서의 이산가족 담론에서 북한은 삶의 모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지워버린 것으로, 따라서 인도주의의 수행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 재회 관련 남북대화에 대한 미디어 기사는, 협상이 성사되면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의심을 확정하고 격렬하게 북한을 비난하는 식으로 구성되었다. 실제 이산가족 상봉 관련 기사 또한 상봉의 감격조차 반공주의 언어로 포획하는 방식으로 쓰였다. 눈물겨운 상봉 장면에 대한 묘사 끝에 이산가족 발생과 영속의 원죄를 북한에 묻고, 상봉을 위해 북에서 온 가족의 세뇌에 의한 이질화를 지적하고, 북한 방문 이산가족은 북한 사회의 비참함을 증언하는 목격자로 위치시키는 등의 전략이 사용되었다. 한편, 교과서는 북한을 가족 파괴자로 재현하면서,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남한의 우월성과 북한의 비인간성에 대한 증거, 공산 척결과 국가발전 의지의 근거 등으로 동원하였다. 이산의 슬픔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고, 남북적십자회담을 소재로 한 단원에서조차 이산가족은 상봉의 기대보다는 북한에 대한 불신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한편, “괴뢰정권”, “이데올로기”, “세뇌된”, “비인간”, “불순한” 등과 같이 북한을 묘사하는 언어들은 이러한 레토릭 아래 뭔가 자연적이고 인간

적인 것들이 숨어 있다는 암시도 주었다. 공산당이 아닌 북한 사람들이 그러한 자연스러움 또는 인간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것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담론들은 남한을 보다 인간적인, 따라서 북한 동포들을 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주체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산가족 이슈는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재현되는 동시에 다양한 반공담론과 접합됨으로써 남한 사회에서 특별한 담론적 장소성을 가지고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이산가족 이슈는, 가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남한의 반공주의에 인간의 얼굴을 제공하였다. 이산가족 이슈와 관련된 인도주의 담론은 남한 사회의 “분단언어”의 문법을 통해 발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전효관에 의하면,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한 모두에서 “우리 혹은 적”이라는 이분법에 기반을 둔 극단적 언어 사용을 생산하였다.⁶²⁾ “분단언어”는 이분법적 언어, 극단적 의미 부여, 지배적 이용 이외 다른 담론이나 소통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적인 언어 실천을 가리킨다. 그는 “분단언어”가 남과 북이 서로를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고 제안한다. 분단체제에서 이산가족 이슈를 다루면서 사용된 “인도주의” 담론은 남한 정부를 “인도주의”의 위치에, 북한을 “과도하게 정치적”이고 “반인도주의적” 위치에 배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주의 담론은 북한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산가족 이슈를 인도주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북한과 대비하여 남한의 국가/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권위주의 정권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였다. 이는 북한을 ‘비인간적’ 집단으로 비난하며 이를 통해 그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수단 중 하나였던 것이다. 내부적으로 이는 다양한 반공담

62) 전효관,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지.”

론과 접합하여 반공의 주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또한 그 자신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무화시킴으로써 긍정적 글로벌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산가족 문제는 남한 정부의 분단정치에 의해 프레임되었으며 역으로 그 분단정치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했다. 따라서 인도주의 분단정치에 대한 분석은 남한 정부의 냉전정치와 특정한 주체의 생산에 대한 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산가족 담론을 구성하는 이러한 분단언어의 문법은 체계모니적이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 인도주의, 가족, 민족에 대한 강조, 이산가족의 슬픔과 가족 재회에의 기대, 상봉의 감격 등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담론 구성요소들은 다른 사회적·정치적 환경에서 다른 행위자들에 의한 다른 방식의 접합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민주화 이후, 이산가족 이슈는 민족담론과 접합되어 민족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⁶³⁾ 짧은 화해와 협력 시대를 거쳐 한반도에 분단정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오늘날, “인도주의” 또는 “인권”과 같은 담론들이 어떤 다른 담론들과 접합되어 특정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

■ 접수: 7월 20일 / 수정: 8월 16일 / 채택: 8월 16일

63) 이에 관해서는 이수정, “‘탈냉전 민족 스펙터클’: 2000년 여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참고하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서울: 역사비평사, 1998).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서울: 대한적십자사, 1976).

_____, 『이산가족백서 2』(서울: 대한적십자사, 1986).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서울: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1991).

한국방송공사,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서울: 한국방송공사 1984).

2) 논문

김귀옥, “이산가족의 범주화와 공동체 형성방안,” 『역사문제연구』, 제19호 (2008).

김재용, “이산가족 문제의 정치성과 인도주의,” 『역사비평』, 제44권(1998).

양승목,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개혁,” 『언론정보연구』, 41권 1호(2004).

이수정, “‘탈냉전 민족 스펙터클’: 2000년 여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민족문화연구』, 59호(2013).

이용기, “이산가족 연구 어디까지 왔나,” 『역사비평』, 제44권(1998).

전효관,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지,” 『탈분단 시대를 열며』(서울: 삼인, 2000).

_____, “남북한 정치담론 비교연구: 의사소통 구조와 언어전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허만호, “6·25 전쟁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휴전회담: 납북자 명부와 휴전회의록 분석,” 『동서연구』, 제25권 3호(2013).

3) 신문

『서울신문』, 1985년 9월 24일, “그리던 고향은 아니었다.”

『조선일보』, 1971년 8월 13일, “망향20년: 500만 월남 동포의 어제 오늘.”

_____, 1983년 7월 3일, “누가 천륜을 막을까: 감격의 이산가족 재회와 남북.”

_____, 1985년 9월 22일, “어머니... 오빠... 목멘 ‘40년 한’.”

_____, 1999년 3월 13일, “사실: 상호주의 포기한 대북비료.”

『한국경제』, 1995년 3월 17일, “남북이산가족 재회촉구/최다서명 등 기네스북 올라.”

『한국일보』, 1985년 6월 2일, “고향방문 등 남북한 교류 장래는: 40년 이산한 풀릴까.”

4) 기타 자료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http://dialogue.unikorea.go.kr/main.do>)

문교부, “5. 할아버지의 생신,” 『도덕 2-2』(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2).

_____, “8. 파랑대문집,” 『도덕 3-1』(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4).

_____, “15. 할머니의 생신,” 『도덕 3-1』(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4).

_____, “15. 할아버지 들으세요,” 『도덕 3-2』(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9).

_____, “흠어진 가족,” 『도덕 4-1』(서울: 대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2).

_____, “통일 할아버지,” 『도덕 4-1』(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2).

_____, “8. 평화통일,” 『도덕 6-2』(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3).

_____, “10. 하나되어 사는 길,” 『도덕 6-2』(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0).

평양방송, 1978년 3월 19일.

KBS 라디오, 1978년 3월 20일

2. 국외자료

1) 단행본

Foucault, Michel, *The Archaeology of Knowledge*(New York: Pantheon Books, 1972).

Grinker, Richard R., *Korea and its Futures: Unification and the Unfinished War*(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Hall, Stuart, *The Hard Road to Renewal: Thatcherism and the Crisis of the Left*(London & New York: Verso, 1988).

- Kim, Choong Soon, *Faithful Endurance: An Ethnography of Korean Family Dispersal* (Tucson, AZ: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7).
- Lowe, Lisa, *Critical Terrains: French and British Orientalism*(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Said, Edward, *Orientalism*(New York: Vintage Press, 1978).
- Wilson, Richard A., Human Rights, *Culture & Context: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London & Sterling, England: Pluto Press, 1997).

2) 논문

- Foley, James, “Divided families in the Republic of Korea”(Ph.D. diss., University of Sheffield, Sheffield, England, 2000).
- Lattas, Andrew, “Humanitarianism and Australian Nationalism in Colonial Papua: Hubert Murray and the Project of Caring for the Self of the Colonizer and Colonised,” *The Australian Journal of Anthropology*, Vol. 7, No. 2(1996).
- Lee, Soo-Jung, “Making and Unmaking the Korean National Division: Separated Families in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Eras”(Ph.D. Dis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6).
- Malkki, Liisa H., “Speechless Emissaries: Refugees, Humanitarianism, and Dehistoricization,” *Cultural Anthropology*, Vol. 11, No. 3(1996).
- Mills, Kurt, “Neo-Humanism: The Rol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Norms and Organizations in Contemporary Conflict,” *Global Governance*, Vol. 11(2005).

Division Politics of Humanitarianism: Issues of Separated Families befor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Lee, Soo-Jung(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ses the process in which South Korean framing of the issues of separated families as humanitarianism before democratization was articulated with the discourses of anti-communism and thus contributed to justification of the authoritarian regimes against North Korea. I call it “division politics of humanitarianism.” Here “humanitarianism” is not neutral, self-evident, and abstract value or goal, but a set of discourses and practices that is always articulated with other discourses and thus produces certain effects. By analysing three main sites, such as inter-Korean talks, media and school textbook in which discourses of separated families have been extensively produced, I examin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I analyze the process how the issue was mainly

framed as humanitarianism despite its' political characteristics. I also pay attention to certain “incompleteness of articulation” or “discursive heterogeneity” in the discourses of separated families which contribute to the possibility of different articulation in different time periods.

Keywords: separated families, humanitarianism, anti-communism, division politics, division language.